

## 일반논문

# 공간적 정의와 탈소외된 도시\*

Spatial justice and the de-alienated city

최병두\*\*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심화된 사회공간적 부정의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적 정의와 탈소외된 도시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절들에서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공간적 부정의에 관한 경험적 사례들과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화에 내재된 부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단초들(‘창조적 파괴’의 개념과 스미스의 ‘불균등발전’이론)을 논의하고, 나아가 보다 규범적 개념으로 공간적 정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공간’과 ‘정의’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재검토하면서, 그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공간적 정의에 관한 최근 연구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르페브르의 모멘트 이론과 소외/탈소외의 변증법에 근거를 두고 공간적 정의의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하비가 최근 제시한 ‘보편적 소외’의 개념과 더불어 자본의 가치 실현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외의 개념을 새로운 이론적 준거로 제시하면서, 현대 도시에서 공간적 정의의 정치를 위해 요구되는 ‘탈소외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강조한다.

주요어: 공간적 정의, 르페브르, 모멘트, 소외, 탈소외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951).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bdchoi@daegu.ac.kr)

## 1. 서론

지난 30~40년간 전개되었던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사회공간적 불균등이 심화되고, 다양한 부문들로 부정의한 현상들이 확산됨에 따라,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공간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거세지게 되었다. 특히 2008년 지구적 금융위기 이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국토환경정책의 추진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무능력한 대처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정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대기업 본사들이 집중한 수도권 지역과 산업 및 인구 유출로 인해 공동화(이른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지방) 지역 간 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켰고 도시 내부에서도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도시재개발(재생)사업 등으로 사회공간적 차별화를 확대시켰으며, 급기야 용산참사와 같은 심각한 도시 갈등을 초래하였다.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악화된 사회공간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구적 규모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에 저항하는 월스트리트 점거운동과 같은 도시사회운동을 유발하였고, 또한 학계에서도 비판적 접근과 대안의 모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발했다. 예로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서구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은 단지 사회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 정의’에 대한 관심도 증대시켰다. 특히 사회공간적(부)정의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의 사회정의에 관한 이론들의 연장선상에서 ‘공간적 정의’를 이해하기보다는 ‘공간적’ 이론이나 도시 이론에 근거를 둔 정의의 개념이나 담론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으며(Soja, 2010; Fainstein, 2010. 또한 Butler and Mussawir,

2017), 이 과정에서 관심을 끄는 학술논쟁을 거치기도 했다(Marcuse et al., 2009).

한국에서도 이러한 서구 학계의 영향으로 도시 및 공간 정의론의 재구성에 관심이 촉발되었고(곽노완, 2013), 이와 관련된 기본소득의 개념이나 도심광장을 점거한 촛불운동의 도시정치적 중요성 등이 강조되긴 했지만, 사회공간적 정의에 관한 이론적 성과는 크게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공간적 정의를 위한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사회공간적 논제들의 재사유’라는 대주제로 제9차 동아시아대안지리학대회(EARCAG)가 2018년 대구에서 개최되었고, 이 논문은 이 학술대회의 기조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 학술대회가 공간적 정의에 관한 한국적 또는 동아시아적 접근에 어느 정도 기여할 지는 불확실하지만, 탈신자유주의를 위해 지난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공간적 부정의의 문제들에 대한 고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을 위한 실천적 및 학술적 논의들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사회공간적 부정의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통계자료의 제시에서 시작하지만, 공간적 정의에 관한 개념적 논의들은 전적으로 서구이론들, 특히 르페브르와 하비의 소외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적 또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서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기존의 사회정의 이론이나 공간적 정의에 관한 최근 논의에서 나아가 공간적 정의를 소외론과 관련시켜 새롭게 개념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우선 다음 절에서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공간적 부정의에 관한 경험적 사례들과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화에 내재된 부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단초들(‘창조적 파괴’의 개념과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을 논의하고, 나아가 좀 더 규범적 개념으로 공간적 정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공간’과 ‘정의’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재검토하고, 그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공간적 정의에 관한 최근 논의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르페브르가

『일상생활 비판』에서 정의에 관해 논의하면서 제시한 모멘트의 개념과 소외/탈소외의 변증법에 근거를 두고 공간적 정의의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여기서 모멘트란 ‘계기’, ‘힘’, ‘경향’ 등을 의미하지만 정확한 번역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음역하고자 한다). 나아가 하비가 최근 제시한 ‘보편적 소외’ 개념, 특히 자본의 가치 실현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외의 개념을 새로운 이론적 준거로 제시하면서, 현대 도시에서 공간적 정의의 정치를 위해 요구되는 ‘탈소외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 2. 공간적 부정의에 관한 논의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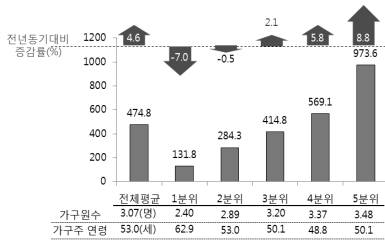
### 1) 경험적 사례들

#### (1) 소득과 부채의 사회적 불평등

정의의 개념은 그 자체로 규범성을 내재하며 사회 구성이나 발전의 목표(또는 이상)로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의에 관한 연구는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의들에 대한 비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규범이나 이상으로서 정의의 개념은 흔히 특정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명분으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부정의에 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좀 더 정의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론이 채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의의 사회·공간적 사례들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사회·공간적 부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적 준거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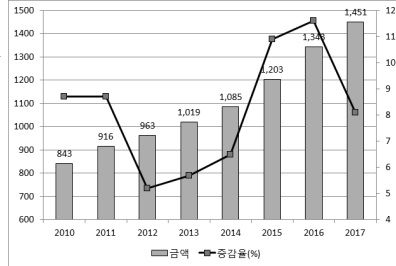
어떤 상황을 정의 또는 부정의하다고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개념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흔히 인식되는 것처럼 부정의는 불평등이나 차별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

〈그림 1〉 소득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만 원)



자료: NEWSIS(2018.11.22).

〈그림 2〉 가계부채 증가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통계청(KOSIS).

정의에 관한 경험적 사례로 우선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자료(NEWSIS, 2018.11.22)에 의하면, 2018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8만 원이지만, 5분위(상위 20%) 소득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973.6만 원으로 1분위(하위 20%) 소득계층의 월평균 소득 131.4만 원에 비해 7.4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전년 동기와 대비해 보면, 5분위 소득층은 4.6% 증가한 반면, 1분위 소득층은 7.0%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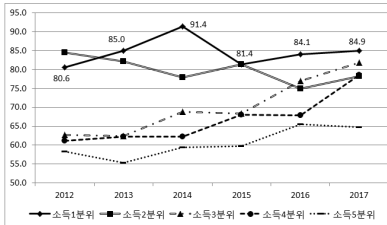
이와 같이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은 5분위 상위계층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과 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재산소득(9.3%)이 많아졌고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4.5%)도 증가했지만, 1분위 하위계층은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많아서 소득이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1분위 소득층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2.9세로 다른 분위 소득층들보다 상당히 높아서, 자신들의 소득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보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최근 활기를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신자유주의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상위 소

득층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화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위 소득층에게는 자신들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화에서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부정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 감소나 삶의 질 저하가 아니라, 어떤 집단들에게는 소득 증대와 물질적 풍요를, 또 다른 집단들에게는 소득 감소와 삶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중적 모멘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가계 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2017년 한국인 10명 가운데 약 4명이 평균 8천만 원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들(즉 국가와 기업들)의 부채 문제도 악화되었지만, 가계 부채도 이들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010년 843조 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1451조 원으로 증가했다(<그림 2>). 이러한 수치는 2010년 이후 매년 5~10% 증가한 것이다. 가계부채는 2012~2014년 사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박근혜정부에서 급증했고 2016년에는 무려 11.5%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이후(2009~2016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OECD 평균가계 부채 증가속도의 7.8배에 달하고,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도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즉 2016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 부채 비중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5.4%로, 영국(93.5%), 미국(80.4%), 일본(62.3%), 독일(53.4%)과 비교된다(《조선일보》, 2018.9.21).<sup>1)</sup> 이와 같은 가계 부채의 급증은 가구의 소비 지출을 제약하면서 생계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도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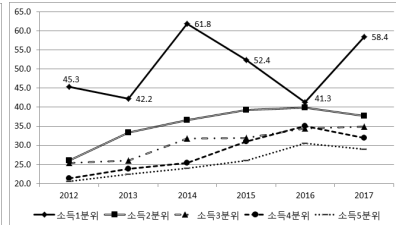
1)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8.3월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128.3%), 호주(122.2%), 덴마크(117.3%), 네덜란드(104.3%), 노르웨이(101.6%), 캐나다(99.4%) 순이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로 보면, 중국과 홍콩(가계부채비율은 각각 49.3%, 71.0%, 작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3.7%, 3.5%)에 이어 3번째를 기록했다(《국민일보》, 2019.10.4).

〈그림 3〉 부채가계의 소득분위별 금융부채/금융자산 추이(%)



자료: 통계청(KOSIS).

〈그림 4〉 부채가계의 소득분위별 원리금상환/가처분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KOSIS).

상환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노동 의욕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가계부채는 크게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며(2018년 3월 기준 각각 72.3%, 27.7%),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등으로 금융부채를 가진 가계는 전 분위에 걸쳐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전체에서 5분위 소득가구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8%, 1분위 소득가구의 비중은 4.2%이다(통계청, 2018). 그러나 부채가계의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1, 2분위 소득층에서는 80~90%로 나타나는 반면, 5분위 소득층에서는 55~65%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난 3~4년간 가계금융부채의 증가는 5분위 소득층이 주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계의 금융부채의 질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며, 심지어 ‘양은 늘었지만 질은 좋아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한겨레》, 2018.10.9). 그러나 부채가계의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금의 비율을 보면, 1분위 계층은 가처분소득이 다른 분위 계층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음에도 이 가운데 원리금상환금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40~60%)(〈그림 4〉). 이에 따라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한계가구(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의 수는 2012년 132.5만 가구에서 2016년 181.5만가구로 증가했다. 이러한 한계가구들은 원리금상환을 위해 엄청난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금융부채를 갚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계부채의 급증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1970년대 서구의 경제침체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이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상황은 가계부채의 규모 및 증가 속도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계 부채의 증가는 특히 저소득계층들로 하여금 부채를 갚기 위하여 노동이 강제되며, 그 노동에 따른 생산물은 물론이고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조차 자신이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Harvey, 201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일하는 메커니즘 속에 갇히게 되었으며, 이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보다 손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보편적 소외’를 만들어내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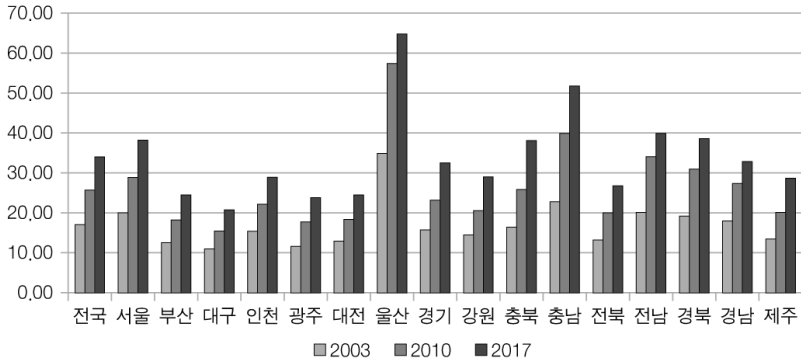
## (2) 소득 이전과 소멸 위험의 지리적 불평등

한국의 지리적 불평등 문제는 소득과 부채로 본 사회계층적 불평등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불균등발전 문제는 흔히 논의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사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표로 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나 대도시들은 대체로 높지 않고, 오히려 지방의 광역도 지역들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그림 5>). 즉 2017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은 지역들은 울산(6441만 원), 충남(5149만 원), 전남(3966만 원) 순이다. 그 다음이 서울(3806만 원)이지만 지방의 광역대도시들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은 다른 광역도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2000년대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것으로, 대체로 1990년대 이후 생산영역에서 이를 관리·통제하는 수도권과 대도시들과 단순 생산활동(즉, 분공장이나 하청공장)이 집중된 광역도 지역들 내 공업도시들의 분업체계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생산성 지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나 소비 등의 삶의 질을 제대로 보여주



〈그림 5〉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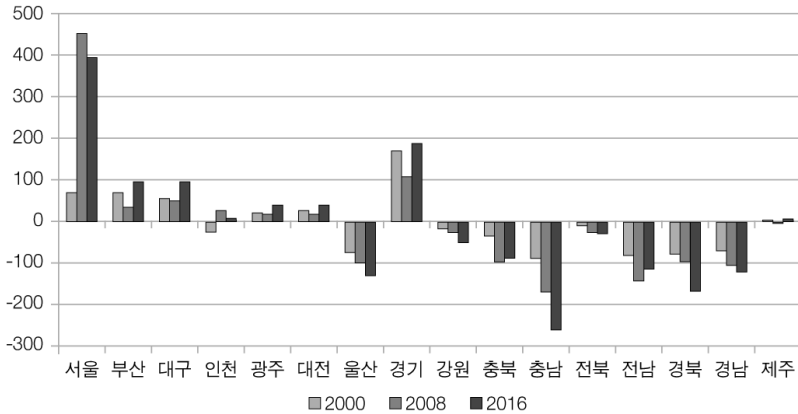
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지역생산산성 지표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나 소비 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지역 간 소득 이전 때문이라고 하겠다. 2016년 지역별 소득유출입 현황을 보면(〈그림 6〉),<sup>2)</sup> 서울로의 순유입이 39.29조 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 경기(18.63조 원), 부산(9.53조 원), 대구(9.12조 원) 순이며, 순유출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으로 25.87조원에 달했고, 그 다음 경북(16.82조 원), 울산(12.99조 원), 경남(12.13조 원)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 간 소득이전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서울과 경기도로의 유입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수도권이 소득 이전의 블랙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지역 간 소득유출입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분사와 분공장(지사 등) 간 지리적 분화나 근로자의 직주 불일치 외에도 지역의

2) 소득 유출입(즉 지리적 이전)은 거주지 요소소득 및 재산소득과 발생지 요소소득 및 재산소득의 차이로 계산된다. 요소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으로, 재산소득은 금융소득(이자, 배당)과 실물소득(임대료 등)의 합으로 계산된다(조정민, 2018). 좀 더 자세한 연구로는 정준호(2018) 참조.

〈그림 6〉 지역별 소득유출입

(단위: 천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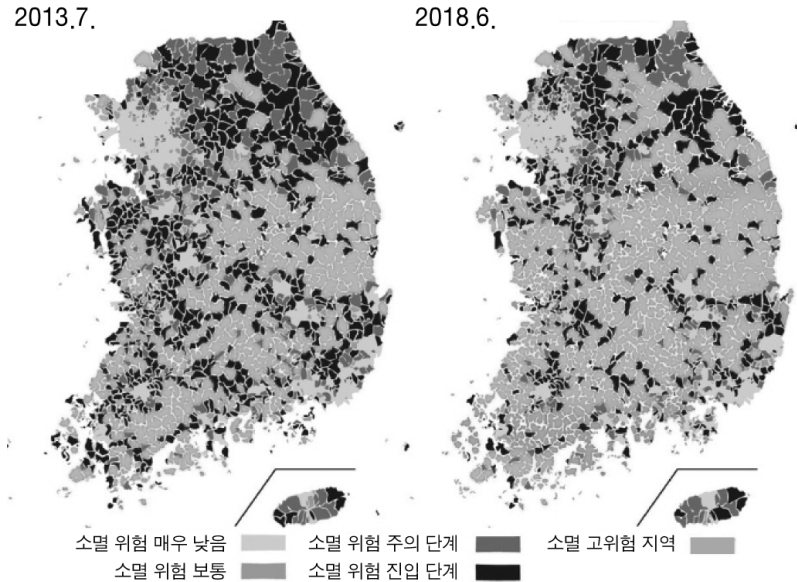


자료: 조성민(2018: 37).

공간편성, 산업구조, 정주여건 등 종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조성민, 2018). 또한 여기에 역외 자산(특히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따른 소득 이전(임대소득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소득 이전은 요소소득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서울은 2000년 22조 원의 재산소득 순유출에서 2016년에는 21조 원의 순유입으로 바뀌었고, 그 외 대부분 지역들은 순유출을 보였다.

이처럼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광역도 지역들의 인구수는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지역이 이른바 ‘소멸’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방소멸’에 관한 논의는 일본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임보영 외 2018; 김경근·이현우, 2017). 지방소멸을 나타내는 지표가 지나치게 간단하지만, 이에 따르면 한국의 시군구(총 228개) 가운데 위험단계에 달한 지역은 2017년 3월 말 현재 85개(37.3%)이며, 2040년에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들(217개, 95.2%)이 이러

(그림 7) 소멸위험지역의 확산(2013.7.~2018.6.)



자료: 마강래(2018); 《한겨레》(2018.11.30)에서 재인용.

한 위험단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경근·이현우, 2017).<sup>3)</sup>

이러한 소멸위험지역의 확산은 지방의 중소도시들과 농촌지역이 경제적 부(잉여가치)의 지리적 유출에 따라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소외지역이라는 의미(학술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떠나가는 소외지역(일반적 의미의 소외)이 급속히

3) 지방소멸의 지표는 이 용어를 처음 제시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간단하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된다. 이에 따른 지표 수치가 1.0 이하는 지방소멸 주의단계, 0.5 미만은 지방소멸 위험단계로 분류된다. 한국의 전체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7년 3월 말 0.97로 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 용어는 지방인구의 감소와 국토공간의 불균등발전에 관한 관심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지표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소득의 지리적 이전이나 지역인구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들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경제적 부의 집중과 더불어 소외된 지역들부터 인구 유입으로 사회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소멸의 위기는 단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이에 따른 주거비 상승과 교육비 증가 등으로 결혼 및 출산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여, 대도시들에도 심각한 저출산을 유발함으로써 대도시 지역들에서도 결국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김경근·이현우, 2017).

이와 같은 지역소득의 지리적 이동과 이로 인한 지역 간 소득격차의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멸위험 양상은 공간적 불평등과 부정의가 만연·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방 광역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더 많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잉여물은 이를 생산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관리되고 배분 또는 재투자되질 못하고, 수도권 지역이나 주변 대도시들의 자본가나 상위계층들에게 전유되고 처분된다. 이러한 공간적 부정의는 단지 지역불평등뿐만 아니라 공간적 소외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간적 소외란 단순히 중심 대도시지역들에 대한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주변화라는 점에서 나아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한 노동의 생산물과 잉여가치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지역 내에 배분 또는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어 생산자들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거나 심지어 이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제체제와 국토공간 구조를 강화시키는데 투입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불평등이나 부정의도 소외의 개념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

## 2) 개념적 증거들

사회공간적 부정의(불평등, 격차 또는 소외 등)를 드러내는 이론적 증거들은 상당히 많겠지만, 특히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의 문제에 관한 설명의 틀로서 우선 ‘창조적 파괴’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예로 외형적으로 도시경관을 바꾸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경관의 파괴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관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 원용될 수 있다(최병두, 2012: 170).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파괴적 계기’와 ‘창조적 계기’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Brenner and Theodore, 2002; Peck et al., 2009). 즉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은 도시의 형태, 토지이용, 주거시장 등에서 공동체적 주거 양식과 공간편성을 파괴하고, 사회공간적 배제와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의 투자 또는 투기를 위해 재창출된다. 여기서 부정의란 두 가지 모순된 힘(모멘트)들이 교차하는 상황, 즉 한편으로 공동체적 도시공간이 파괴되는 모멘트(계기)와 다른 한편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도시공간이 창조되는 모멘트가 동시에 작동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창조적 파괴의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초래되는 도시 경관의 외형적 변화를 서술하는데 유용하지만, 나아가 자본주의 도시화의 메커니즘을 훨씬 더 구조적으로 설명해준다. 즉 “창조적 파괴란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사용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기존 경관의 파괴 그리고 유희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새로운 경관의 창조를 의미하며, 이 과정은 소유 및 이용 주체의 전환과 더불어 도시(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편향적으로 향유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피해)을 도시의 경제적 빈곤계층이나 정치적 소외집단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최병두, 2012). 요컨대 창조적 파괴의 개념은 자본주의적(특히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의 문제를 두 가지 상반된 모멘트들의 모순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표 1〉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파괴적 및 창조적 모멘트

주요 측면	파괴적 모멘트	창조적 모멘트
도시형태	- 전통적 이웃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적 주거 및 도시 공간의 파괴 - 거주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사회공간적 도시계획에서 후퇴	- 빗장도시, 또는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정화된(purified) 공간의 창출 - 투기적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진전, 사회공간적 양극화의 심화
도시 토지이용	- 국지적, 소규모 토지이용을 위한 전통적 지역정책의 배제 - 주거와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공간의 파괴 또는 파편화	- 역외자본 유치를 위한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의 시행 - '최고·최적' 토지 이용 원칙,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토지 인클로저
도시 주거시장	- 소규모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거 및 노후주택 철거 -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및 주거 안정 지원제도 폐지	-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과 투기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중상위계층의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대출

자료: Brenner and Theodore(2002); Peck et al(2009); 최병두(2012: 171)에서 축소·수정해 재인용.

즉 (부)정의는 서로 반대(또는대립)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을 가진 두 가지 갈등적 또는 모순적 계기들 간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개념은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슈페터에 의해서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창조성을 인정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의 자기 파괴적 과정을 강조하지만,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무한한 창조성을 찬양했으며, 그 파괴성은 대체로 창조성을 위한 정상적 비용의 문제로 치부했다. 이러한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은 예로 제습의 기업주의 도시 개념에 반영된다. 즉 슈페터는 기업주의를 생산요소들의 새로운 조합이나 기술혁신 등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창출로 정의하며, 제습(Jessop, 1998)은 이러한 슈페터의 개념을 도시적 차원에 원용하여, 기업주의 도시를 새로운 기업혁신의 방법들(예를 들어 새로운 재화나 생산방법의 도입, 새로운 원료나 반제품의 공급, 새로운 시장 개설, 새로운 독점적 조직 편성 등)의 촉진에 기반을 둔 도시로 정의한다. 이러한 제습의 기업주의 도시 개념은 하비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하비는 창조적 모멘트와 더불어 파괴적(부정적) 모멘트를 동시에 강조하는 반면, 제습은 창조적(혁신적) 모멘트를 주로 강조함으

로써 창조적 파괴의 개념에 내재된 모멘트들 간 모순적 관계를 간과했다.

사회공간적 부정의에 관한 또 다른 이론적 준거로, 닐 스미스(N. Smith)의 불균등발전론을 살펴 볼 수 있다(스미스, 2018). 그는 불균등발전을 자본축적을 위한 공간의 생산에서 서로 반대 경향을 가진 모멘트들, 즉 차별화와 균등화 경향들 간 관계로 파악한다. 여기서 차별화 경향은 ‘노동의 분업’에서 도출된다. 그에 의하면 노동의 분업은 사회의 발전 수준과 조건을 공간적으로 차별화하는 역사적 기반이다. 즉, 노동의 분업은 초기에는 생산의 자연적 조건의 차이에 근거를 두지만, 사적 소유제의 확립에 따라 자연자원에의 접근성의 차이와 더불어 계급적 차별화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해 노동의 분업은 도시와 농촌 간 분화와 더불어 점차 사회적 분업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분업들로 세분화되면서 사회공간적 차별화를 증대시킨다. 균등화란 생산 조건의 수준을 균등하게 만드는 경향을 의미한다. 균등화는 사회를 공간적 차이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역사적 경향(즉,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 부문에서 시장 경쟁을 통한 이윤율 균등화 경향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 수준에서 생산 조건의 균등화는 자본주의에서 추상적 노동의 보편화에 연유하며, 신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통해서 더욱 일반화된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은 세계 전반에 걸쳐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확장·심화시키는 과정, 즉 세계경제 시장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획일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에 내재된 배제와 양극화의 속성으로 인해 지구공간의 과편화와 구획화를 초래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균등화와 차별화 경향(또는 모멘트)들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즉 그에 의하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의 발전은 전혀 없는 수준으로 공간의 생산을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이는

주어진 공간의 절대적 팽창이라기보다는 지구적 공간의 내적 차별화, 즉 상대적 공간의 더 큰 배경 속에서 차별화된 절대적 공간의 생산을 통해 달성되었다”(스미스, 2018: 171).

이러한 불균등발전 이론 또는 지구적 공간의 균등화/차별화 과정에 관한 닐 스미스의 설명은 그 자체로서 사회공간적 부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 원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차별화 과정이 불균등이나 부정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균등화 과정이 평등이나 정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오늘날 국토공간의 사회공간적 부정의는 노동의 사회공간적 분업에 따라 유발된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나 경제·정치적 권력이 집중된 대도시(수도권)와 단순히 분공장의 생산설비를 작동시키는 지방 공업도시 간 불평등한 사회공간적 관계로 드러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공간적 불평등이나 개별 지역 간 격차는 흔히 자본의 축적 과정에 내재된 균등화 메커니즘에 의해 외형적으로 상쇄되거나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부)정의는 관계적 공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모순적 계기들의 변증법적 관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창조적 파괴’의 개념이나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은 (부)정의가 두 가지 대립적 모멘트들 간의 모순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개념적 준거라고 할 수 있다.

### 3. 공간적 정의의 재개념화

#### 1) 공간적 정의에서 공간의 개념

지리학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은 1973년 하비의 고전적 저서, 『사회 정의와 도시』의 출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최근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특히 정의의 공간적 차원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사회공간적 불평등과 부정의가 심화됨에 따라 지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 간에 공간적 정의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간적 정의’라는 용어도 이제 상당히 친숙해졌다. 그러나 공간적 정의의 개념을 구성하는 ‘공간’과 ‘정의’는 각각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용어이며, 이 두 가지 용어를 결합한 ‘공간적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규정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하겠다.

최근 공간적 정의에 관한 관심을 부활시킨 지리학자들 가운데 소자(Soja)는 이에 관한 연구의 출발점에서 “정의란 어떻게 정의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인 지리, 즉 단순히 어떤 배경적 반영이나 또는 서술적으로 지도화될 수 있는 일단의 물리적 속성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적 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oja, 2010: 1). 그러나 소자 자신은 공간적 정의에 관한 명료한 개념 정의를 내리길 거부한다. 물론 소자는 그의 저서 전반에 걸쳐 이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지만, 공간적 정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서술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윌리엄스(Williams, 2013)는 공간적 정의를 이를 촉발하는 공간의 역할을 전제로 한 분석적 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근본적 의문들이 제기된다. 즉 공간적 정의에서 공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정의가 공간적 편성을 분석하는 데 응용될 수 있는가?

그동안 정의에 관한 이론이나 개념들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측면을 무시해왔지만, 분명 공간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경험적 사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의 계층적 이전뿐만 아니라 공간적 이전은 심각한 지리적 불평등과 부정을 만들어낸다. 또한 이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의 해체 또는 소멸 위기는 인구와 소득의 지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을 반영한다. 또한 이론적 증거들에 관한 논의에서 공간적 부정의는 도시공간의 창조적 모멘트와 파괴적 모멘트, 또는 균등화

경향과 차별화 경향의 변증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정의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원을 가지며, 따라서 사회와 공간 간 관계를 전제로 고찰되어야 한다. 소자가 르페브르의 공간개념을 원용하여 제시한 ‘사회-공간적 변증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과정은 공간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정의 또는 이를 함의한 정의로운 사회적 관계는 공간적으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정의를 개념화함에 있어 공간은 정의의 관계를 생산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변증법에서, 공간은 단순히 사물 그 자체이거나 또는 어떤 사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 사물들 간에서 생성되는 일단의 관계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은 최근 지리학에서 나아가 사회이론 전반(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서 잘 알려져 있고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로서 공간을 이해한 대표적인 이론가는 르페브르이다. 그에 의하면, “공간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들(객체들과 생산물들) 간 일단의 관계들”로 이해된다(Lefebvre, 1991: 13). 달리 말해, 공간은 독립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요동하는 물질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Williams, 2013).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은 하버, 매시 등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예로 하버는 관계적 공간뿐만 아니라 절대적 공간, 상대적 공간 개념을 거론한다), 대체로 공간(그리고 시간)을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과정과 사건들로부터 도출된 관계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은 지리학과 더불어 기존 사회이론이나 철학에 준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즉 관계적 관점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지구화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지구적 규모의 이동성과 상호연계성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카스텔(Castells)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공간은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 즉 균등화와 차별화

의 변증법(또는 이른바 ‘지구-지방화’ 과정의 개념)에 함의된 것처럼, 자본주의적 공간은 지구적 규모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지역적 변화(도시마케팅, 지역혁신, 도시 거버넌스, 장소 정체성 등)를 수반하게 되었다. 일단의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변화한 지역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관계적 공간의 지나친 일반화를 비판하고 대신 전통적 지리학의 주제들을 구성했던 장소, 지역, 영역 등의 개념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이른바 ‘신지역주의’ 논쟁을 유발하기도 했다.

신지역주의에 관한 논의는 경험적 연구에서 다양한 세부 분야들을 포함하며, 특히 특정 경제적 영역에서 지역혁신을 강조하는 제도학과,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지역적 (또는 다규모적)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 그리고 장소 정체성에 대한 재조명 등 유의한 성과들을 보여주었다 (MacLeod and Jones, 2007: 1178). 사실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도 개별 국가들은 여전히 영역에 기반을 둔 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들 간 경쟁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의 지역성을 전제로 하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조하는 정체성 역시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지구적 변화와 더불어 공간적 관계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관계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화 시대에 새롭게 구축된 공간적 편성들, 즉 네트워크와 관계적 연계망은 더 이상 영역적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의 정치나 정체성의 문화도 결코 폐쇄된 지역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규모적 거버넌스나 혼종적 정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관계적 공간 개념과 영역적 공간 개념을 새롭게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게 되었다(Jonas, 2012 등 참조). 그러나 영역성과 관계성의 이원론을 벗어나서 이들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데는 여러 문제들이 내재하며, 아직 완전히 통합된 공간 개념이나 이론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시도들 가운데 하나는 브렌너(Brenner, 2009)가 르페브르의 국가공간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제시한 국가공간의 재규모화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지구화시

대 국가공간은 ‘텅빈 국가’(blank state)에서 새로운 규모적 배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규모 조직에 의한 기존 경관과 부분적으로 충돌하면서 재구성되는 갈등적 층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규모적 관계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지역적 공간의 등장은 기존의 사회공간적 편성과 중첩적·경쟁적·보완적·모순적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과 영역적 공간 개념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공간적 정의에서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적 정의에서 공간은 정의로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공간이며, 또한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적 사유는 공간의 모든 측면들을 포괄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은 정의를 위한 정치나 투쟁이 지구적 규모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국지적인 지역이나 장소를 배경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 개념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시켜 보면, 정의를 개념화하고자 할 경우 어떤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정의는 보편적 가치인가 아니면 장소-특정적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철학이나 사회이론에서 정의는 어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성을 가지는 것처럼 개념화된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은 그것이 실현되거나 도입되는 장소 특정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정의에서 공간은 관계적으로 개념화되어 하며, 또한 정의를 위한 장소의 정치는 그 영역성에 기반을 두게 된다.

요컨대 관계적 관점에서 보면, 공간적 정의는 역동적 과정에 있는 공간적 관계의 특정 속성을 의미한다. 또한 공간적 정의를 위한 장소의 정치에서 보면, 공간적 (부)정의와 이를 위한(또는 반대하는) 정치는 장소나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적절하게 이해될 수 없다. 여기서 영토, 장소, 지역 등은 흔히 절대적 경계와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규정되지만, 사실 닐 스미스의 주장에 함의된 것

처럼 한 지역(장소 또는 영토)의 특성은 공간적으로 전개되는 불균등발전의 결과 또는 이 과정의 한 국면에서 파편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간적 정의를 위한 투쟁은 장소의 정치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왜냐하면 어떤 주어진 장소는 공간적 정의를 위한 진행 과정에서 한 모멘트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Harvey, 2009)는 “장소는 개인적인 것이 특정 장소들에서 국지적 연대 조직을 통해 정치화되는 기본적 모멘트에서 나아가 더욱 보편적인 권리와 정의의 정치로 이어준다”고 주장하는 한편, 장소에 내재된 이러한 모멘트(또는 힘)들은 흔히 지역주의 정치에 의해 물신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공간적 정의의 개념화에서 공간은 관계성의 모멘트와 영역성의 모멘트를 통합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적 정의를 위해 영역성과 관계성이 어떻게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브렌너가 원용한 르페브르의 국가공간의 재규모화 개념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르페브르가 제시한 국가공간 재규모화 개념은 국가의 역할 변화 및 자율관리(*autogestion*)의 등장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즉 브렌너와 엘덴(Brenner and Elden, 2009: 3)이 이해한 것처럼, 르페브르의 자율관리 개념은 물신화된 국가로부터 관리와 자율을 되찾기 위하여 이웃사회, 도시, 지역, 국민국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노동자 관리운동과 관련된다. 르페브르의 자율관리 개념에 의하면, 국가가 (노동자나 지역주민들의) 자율관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불가능하다면, 자율관리는 국가를 ‘풀뿌리’ 민주적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율관리 개념은 소외의 극복을 의미한다. 즉 “자율관리를 통해서만, 자유로운 결사체(*association*)의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여, 어떤 작품(*oeuvre*)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전유, 탈소외(*de-alienation*)라고 불린다”(Lefebvre, 2009: 150).

## 2) 공간적 정의에서 정의의 개념

정의란 단일한 개념으로 규정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의는 다양한 철학적 및 사회이론적 전통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성되어왔기 때문이다. 매우 단순한 경험적 연구에서 특정한 공간적 편성은 (부)정의에 관한 지표들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경험적 사례들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득의 사회공간적 불평등 분포나 지리적 이전은 공간적 (부)정의의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예로 공공재의 적정한 공급(예로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이나 공공서비스 시설(병원 등) 입지의 균등한 분포는 공간적 정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공간적 분포 자료만으로 공간적 (부)정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예로 공공서비스 시설이 절대적 공간에서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접근성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적 정의의 문제는 항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공간적 정의는 정의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사회이론적 전통에 따라 개념화될 수 있다. 예로 잘 알려진 롤즈(Rawls)의 정의론에 의하면, 정의로운 공간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또는 역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공적 재화나 서비스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두 가지 기본원칙들, 즉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통해 전체 분배가 개선될 있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이 공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은 경험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한 도시에서 병원(또는 역으로 공해유발시설)이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 만약 불균등하다면 이는 도시의 저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가라는 점에서, 공간적 정의가 파악될 수 있다. 또 다른 이론들로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나 공리주의적 정의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공간적 정의를 개념화하기 위해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적 정의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이와 같이 기존 정의 이론이나 개념들을 단순히 공간적 측면으로 연장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에 관한 이해와 정치적 실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소자(Soja, 2010: 5~6)는 “공간적 정의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의가 단지 공간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간적 정의가 오늘날 상대적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정의의 수많은 여러 성분이나 측면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고 주장한다. 대신 소자는 정의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규정한 영(Young)의 이론을 긍정적으로 차용하여, 일터 및 가정에서의 착취, 사회의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정치적인 참여와 권력의 박탈,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을 공간적 정의로 이해한다. 나아가 소자는 이러한 영의 (부)정의 개념을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결합시켜서, 도시 공공정책 결정에의 참여와 더불어 도시를 스스로 관리하고 재전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각시키고자 한다(곽노완, 2013).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은 그 자체로서 매우 유의한 개념이며 또한 바로 공간적 정의의 개념과 연결된다. 즉 소자(Soja, 2010: 95)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두 개념들, 즉 공간적 정의와 도시권의 개념이 오늘날 용례에서 긴밀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시켜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공간적 정의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이해된다. 즉 버틀러(Butler, 2017: 121)가 지적한 것처럼, 이 개념은 “공간생산을 둘러싼 투쟁의 정치적 차원” 또는 “공간의 자율관리를 향한 정치적 지향”을 함의한다(또한 Lefebvre, 1991: 166~167; Lefebvre, 2009: 138~152 참조). 이와 같이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개념과 이에 기반을 둔 브렌너의 ‘국가 공간의 재규모화’에 관한 논의 그리고

정의와 관련하여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이를 재구성한 소자의 공간적 정의론은 모두 르페브르가 그의 생애사적 연구 전체에 걸쳐 강조했던 자율관리 또는 (공간의) 재전유와 탈소외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의 (공간적) 정의 개념 자체와 탈소외(또는 탈소외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은 다음 절들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그가 주창한 ‘공간의 생산’ 개념과 관련하여 공간적 정의를 재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간적 정의에 관한 경험적 및 이론적 접근에서 공간은 흔히 정의를 위한 재화나 어떤 배경으로 간주된다. 즉 공간은 공공재나 서비스의 분배를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제공하거나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배경의 역할을 한다. 물론 여기서 공간은 그 자체로서(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할 재화나 어떤 사물(또는 생산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예로 오늘날 도시공간에서 토지(개별 필지)의 소유와 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 공간의 일부 그 자체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은 단지 재화의 분배를 측정하거나 그 자체로 분배되어야 할 사물인 것은 아니다. 공간은 생산되고, 유지되고, 소멸되는 어떤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절대적(또는 영역적) 공간보다 관계적 공간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하게, 공간적 정의는 정의로운 공간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론적 논의에서 공간적 정의의 개념화는 기존의 사회정의 개념이나 이론들을 응용하여 공간적 맥락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능가해야 한다. 사실 공간적 정의의 개념은 사회적 정의의 하위 범주로 적절하게 규정되기 어렵고, 또 그렇게 규정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공간은 사회의 하위범주가 아니라, 상호 변증법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정의의 개념화를 위하여 어떤 생산물로서 공간의 개념에서 ‘공간의 생산’의 개념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르페브르(Lefebvre, 1991: 90)에 의하면, “공간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객체 또는 생산물)들 간 일단의 관계이다.” 달리 말해, 공간은 사용되고 소비될 생산수단



이거나 생산물이지만, 또한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특정한 속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정의 이론은 단순히 생산물로서 공간의 분배를 위한 정의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공간의 생산’을 위한 정의를 요청한다. 공간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이거나 또는 이를 통해 생산된 산물이지만, 또한 생산력, 노동의 분업, 소유권 등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공간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결과이며, 또한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공간의 사회적 생산은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의 생산 개념을 통해 ‘생산물’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주목하여, 생산 과정, 생산 주체, 생산 대상(그리고 생산물)을 통합한 생산 개념을 제시한다(장세룡, 2006).

이와 같은 공간의 생산 개념에서 공간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제도,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관념과 언어 등의 생산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이 세 가지 계기들(moments), 즉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한다. 공간적 실천은 우리가 물질적 공간 속에서 지각하면서 반복하는 일상적 실천의 양식을 의미하며, 공간의 재현은 논리적 사유를 통해 공간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현의 공간은 사회적 규범으로 간주되는 공간적 실천에서 벗어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공간 생산의 이러한 세 가지 측면들, 즉 지각된 것, 인지된 것 그리고 체험된 것(그리고 공간적 실천, 공간 재현, 재현 공간)은 세 가지 분리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보다 정확히 말해 르페브르가 지칭한 ‘삼항변증법적’)으로 상호연계된 모멘트(즉 계기)로 파악된다(신승원, 2014).

공간의 생산에서 삼항변증법적으로 상호연계된 모멘트에 관한 르페브르의 논의의 틀은 공간적 정의를 세 가지 계기들로 개념화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공간적 정의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그가 직접 ‘정의’의 개념과 연계시켜 논의한 ‘모멘트’의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공간적 정의를 그가 제시한 ‘공간의 생산’의 세 가지 계기들, 즉 물질적 공간(지각된 공간), 공간의 재현(인지된 공간), 그리고 재현의 공간(체험된 공간)과 관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여기서 제시되는 공간적 정의의 세 가지 측면들은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 생산의 세 가지 계기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흔히 고려되는 바와 같이, 공간은 생산의 대상이나 결과물(즉 물질적 자연 자원이나 생산물, 그리고 이들의 분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적 공간과 관련된 정의의 문제는 분배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물질적 공간의 분배적 측면에서 공간적 정의는 물질적 자원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생활을 위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균등한 분배(또는 분포)와 관련된다(분배적 정의). 둘째 사회적 공간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공간적 정의는 생산 과정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의(예로 생산수단 및 생활수단의 독점적 소유관계에서부터 공간 생산을 위한 의사결정에서의 배제에 이르기까지)를 해소하고 생산 및 재생산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추구한다(생산적 정의).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공간의 구성 및 실천과 관련하여 공간적 정의는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억압과 멸시를 해소하고 타자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존중과 상호인정을 의미한다(인정의 정의).

#### 4. 모멘트로서 공간적 정의와 소외/탈소외의 변증법

##### 1) 모멘트로서 공간적 정의

공간적 정의는 이와 같이 공간의 생산과 관련된 3가지 측면들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해 3가지 모멘트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르페브르의 연구에서 ‘모멘트’(moment)는 단순한 서술적 용어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철학적 개념 또는 이론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정의의 개념을 좀 더 새롭고 정교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그가 제시한 모멘트 이론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Butler, 2017). 모멘트의 개념은 르페브르가 자서전적이며 자기비판적인 저서, 『전체와 나머지(*La Somme et le Reste*)』에서 처음 제시했고, 『일상생활 비판』 제2권에서 일상성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방법론적 도구로 이론화한 것이다. 르페브르의 설명에 의하면, “모멘트는 그 자체로서 목적을 두고, 욕망하며, 선택한 ‘불가능한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이다. … 이 점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변증법적 운동이 시작하며 이에 동반되는 모든 결과들을 가지는 시점이다”(Lefebvre, 2002: 347). 그는 모멘트를 일상생활의 공간성에서 유발되는 ‘현전의 양식’(modality of presence)으로 규정하고, 이를 존재의 총체성(또는 가능성)에 뿌리를 둔 일련의 시간적 잠재성과 연계시킨다(Lefebvre, 2002: 345; Gardiner, 2004: 243; Bulter, 2016: 122 재인용).

르페브르의 이러한 ‘모멘트’ 개념은 영미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비가 서술한 『공간의 생산』 후기에 의하면 이 개념은 르페브르의 저술과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비는 르페브르가 ‘모멘트’를 “일상적 존재에 담겨진 가능성들의 총체성을 어떻게 해서든 계시하는, 쏠살같지만 결정적인 센세이션(sensation)(기쁨, 굴복, 역겨움, 놀람, 공포, 분노의 센세이션)으로 해석했다”고 서술한다. 여기서 ‘센세이션’은 어떤 순간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순간들의 진행 과정에서 모든 (때로 혁명적인) 가능성의 양식들이 드러나고 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모멘트들은 단절(rupture)의 점들, 가능성과 강렬한 도취감의 급진적 인식의 지점으로 인식된다”(Harvey, 1991: 429). 이러한 단절의 모멘트들은 가능성 그 자체가 아니라 ‘불가능한 가능성’ 또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간의 변증법적 운동의 출발점으로 이해된다. 하비에 의하면, 이러한 모멘트의 사고는 파리코뮌이나 1968년 혁명운동

에서 형상화된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이러한 모멘트에 관한 르페브르의 개념화에서 중요한 점은 일상성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는 내재적 능력으로서 모멘트의 사고이며, 이러한 사고는 그가 직접 제시한 정의의 모멘트와 연계된다는 점이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공간적) 정의는 그의 모멘트 개념과 관련하여 규정된다. 즉, “우리는 정의를 덕목이며 또한 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정의를 일상성과 개인적 의식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괄하도록 제한하거나 확장시킬 경우, 우리는 정의를 모멘트로 이해할 수 있다”(Lefebvre, 2002: 354). 왜냐하면 정의와 관련된 모멘트들은 판단 행위의 가능성으로 구성되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멘트로서 정의는 단순히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진부함(소외)로부터 단절의 문제 그리고 절대적 가치로서 정의를 개념화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모멘트의 개념은 정의가 기존의 이론이나 이에 관한 인식들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규정되도록 한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우리는 정의를 일상생활의 실천을 통해 추진되는 덕목으로 생각하든지 또는 제도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포부로 생각하든지 간에, 정의의 모멘트는 ‘절대적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르페브르에 의하면, 정의가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거나 성취되는 순간, 이에 내재된 부정성이 작동하여 운명적인 실패 또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4) 그러나 하비 자신은 이러한 모멘트의 개념과 관련하여 르페브르의 저서들보다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찾아낸 6가지 ‘모멘트’(기술, 자연, 생산,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지적 개념화 등)들을 상호관련된 사회변화의 힘으로 제시하지만, 이들이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의 설계에 응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르페브르처럼 공간성과 직접 관련시켜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능성/불가능성, 소외/탈소외/재소외의 변증법적 관계와 관련시키지도 않았다(Harvey, 2009).

모멘트가 절대적인 것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는 정해진 소외를 고취하고 규정한다. ... 모멘트란 소외시키는 것이고 또한 소외된 것인 한, 이는 특이한 부정성을 가진다. 이는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이는 실패를 향해 돌진한다. ... 비극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간 연계는 심원하다. 비극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며, 일상 속에서 존재하게 되며, 항상 일상으로 되돌아간다(Lefebvre, 2002: 347).

어떤 의미에서 정의는 일상생활 내에 잔존하면서 규제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법적, 행정적 제도나 전략들을 탈안정화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유토피아적 추동력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르페브르에 의하면, 인간세계에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들은 실패를 향한 비극적 궤적을 따르도록 운명지워져 있다(Lefebvre, 2002: 354~355). 일상성의 진부함으로부터 단절의 모멘트들은 실패와 비극적 상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정의의 모멘트를 유토피아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이 상호교차하는 지점에 위치지운다. 그러나 르페브르는 이러한 정의의 모멘트에 관해 회의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정의의 모멘트는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 ‘의사유령적 지위’(quasi-spectral status)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끊이지 않는 희망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Lefebvre, 2002: 347).

르페브르가 제시한 단절의 모멘트로서 (공간적) 정의의 개념화는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공간적 정의는 어떤 보편적 가치나 절대적 상황으로 개념화되기보다는 일상적 활동들의 진부함으로부터의 단절을 위한 모멘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공간적 정의는 단지 어떤 목적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기보다는 일상적 활동의 모멘트들에서 언제든지 나타난다. 둘째 공간적 정의는 일상생활의 공간성 내에 있지만 또한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즉 잠재된 유토피아적 추진력에 의해 추동되는 가능성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일상생활의 진부함(또는 소외)으로 인해 언제든지 실패나 비극으로 빠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셋째, 그러나 절대적 정의는 그 자체로서 소외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한 것이지만, 또한 일상생활에서 정의의 모멘트들은 불가능한 것을 실제로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는 끈질긴 희망을 만들어 낸다. 즉 르페브르에 의하면,

정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은 없다. ... 정의는 우리가 그 주변에서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절대적인 것이다. 모든 절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는 요구와 소외를 만들어낸다. 정의에는 절대성이 있다. 이는 다른 것들처럼 잡히지 아니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으며, 긴급한 것이다. 그러나 모멘트로서 정의는 필수적인 것이다(Lefebvre, 2003a; Bulter, 2016: 125에서 재인용).

## 2) 정의와 소외/탈소외의 변증법

르페브르의 연구에서 모멘트로서의 (공간적) 정의의 개념은 그의 『일상생활 비판』(3부작)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사적 연구 전반에 걸쳐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었던 논제, 즉 소외 이론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그가 일상생활에서 ‘단절의 모멘트’를 논할 때, 이는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소외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또한 르페브르는 정의의 절대성 또는 유토피아적 성향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이를 소외/탈소외의 변증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정의가 절대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로부터 소외(해체적 관점에서)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반을 둔다. 나아가 르페브르가 정의의 개념을 ‘탈소외’의 개념과 같은 것 또는 등치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로, 그는 “일상생활의 사소함과 관계에서 탈소외되기 ... 이 모멘트는 [다시] 소외가 된다. 이러한 탈소외되기는 그자체로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기 때문에, 그 모멘트는 결정된 소외를 고취시키고 규정한다”(Lefebvre, 2002:

347).

소외의 개념은 정의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것이 인지되는 그 모멘트(순간)부터 절대적인 것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르페브르가 서술한 바와 같이, 예로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원하는 사람(즉 정의로운 인간)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정의를 원하며, 정의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려 하지 않고 정의에 따라 판단하고 실천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절대적 의미로서) 정의가 인간의 판단과 실천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 정의를 소외된 물신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는 ‘정의로운’ 인간을 소외시키게 된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특정한 소외, 즉 절대적이 되도록 고취하는 도덕적 의식의 소외로 빠져든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는 그 자체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실현 되도록 시작하기조차 어렵다. 정의의 실현은 정의의 억압과 폐기를 의미한다”(Lefebvre, 2002: 354).

이와 같이, 정의의 모멘트는 이의 소외, 그 자체적인 부정성을 가진다. 정의가 절대적 의미로 소외될 때, 즉 정의가 최고의 심판관으로 군림하게 되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강력하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지만, 이는 또한 세계가 멸망하는 모멘트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정의의 모멘트를 총체화/부정성 또는 ‘소외/탈소외/재소외’의 변증법적 운동에 위치지운다. 만약 공간적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면, 즉 비극에 빠지게 된다면, 이는 소외/탈소외의 변증법에 내재된 모멘트의 부정성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의의 모멘트는 그 자신의 소외 그리고 그 자체 부정성을 내재하며, 소외와 탈소외의 모멘트에 내재된 부정성으로 인해 정의의 비극이 유발된다. 즉 “정의의 비극(실패, 부정성)은 진정한 모멘트들 어디에나 있다. 이의 성취는 이의 상실이다. 다시 우리는 총체화/부정성 또는 ‘소외/탈소외/재소외’의 변증법적 운동에 봉착한다.” 그러나 모멘트의 부정성으로 인해, 정의의 모멘트의 진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극적인 것

은 진정한 모멘트들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소외-탈소외-재소외의 변증법을 피할 수 없다.

르페브르가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모멘트 이론과 소외 개념은 헤겔의 철학에서 연유한다(Lefebvre, 2002: 343). 헤겔의 사유체계, 특히 변증법에서 모멘트라는 용어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즉 모멘트는 어떤 것이 그 대립자와 통일되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때 이러한 통일된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의미한다. 변증법적 관계에서 모멘트는 어떤 것이 그 대립자로 이행하고 그로부터 다시 자기로 귀환하는 과정이지만 또한 앞선 과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지양한다. 이러한 모멘트의 개념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자기의식의 발전 과정, 즉,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 정신 그리고 절대적 정신의 단계를 거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과 관련된다.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지만 아직 자신의 본질을 의식하지 못하는 주관적 정신 단계의 자기의식은 자신의 정신을 대상화(즉 자기소외)함으로써 자기의 본질을 의식하게 되고, 나아가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 정신의 영역에서 남아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고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이 획득되는 단계로 발전한다. 절대 정신의 단계에서 자기의식은 비로소 자기 소외를 지양하고 타자적 존재에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모멘트는 이러한 정신의 자기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증법적 전환(지양)의 계기로 이해되며, 소외는 이러한 자기운동 원리를 체현한 절대 정신의 실현으로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이러한 헤겔의 소외이론에서 정신의 자기소외와 소외의 극복 과정이 모두 정신의 활동, 즉 사변적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비판한다. 즉 마르크스는 『경제학-철학 초고』에서 “헤겔에 따르면, 인간 즉 인간의 본성을 자기의식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적 본성의 모든 소외는 자기의식의 소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 과정을 역전시켜 사회의 발전을 역사의 물질적 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즉 헤겔의 소외개념은 사회



적 관계의 산물인 현실적 소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정신의 자기소외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소외의 지양도 정신의 자기 운동 과정, 즉 정신의 외화인 소외를 정신이 다시 점유함으로써 소외가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초기 연구에서 인간의 본성과 소외에 관한 유물론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자본론』과 같은 현실 자본주의에 관한 분석에서는 소외를 포괄적 개념으로 논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특히 임금 노동 과정)에서 유발된 부정적 상황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노동이나 경제 활동의 결과물인 상품이나 화폐의 물신성과 관련시켜서 서술했다고 알려져 있다.

르페브르는 변증법적 전환과 관련된 이와 같은 모멘트와 소외에 관한 헤겔과 마르크스의 이론적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또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르페브르는 기본적으로 헤겔적 변증법을 수용하지만, 인간의 자기의식이 완전한 절대정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모멘트들을 통한 “자기의식의 변증법적 운동은 현실 및 개념의 전환점”을 이루지만, “부정성의 근본적인 개입은 탈소외를 유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소외, 즉 부정의 부정을 통한 [탈소외의] 폐기를 유도”하기 때문이다(Lefebvre, 2002: 343). 또한 마르크스의 논의와 관련하여 르페브르는 “헤겔이 사변적으로 제시했던 소외는 마르크스의 철학적 사상에서 역사적 사실”이 되지만, “특히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들에서 소외는 자본주의 내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해 유발된 경제적 소외(화폐나 상품의 물신성 등)에 한정시켰으며, 그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적으로 서술한다(Lefebvre, 2002: 207).

요컨대 르페브르에 의하면, 소외는 하나의 단위 현상 또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며, 같은 맥락에서 탈소외는 절대적인 것 또는 소외 일반의 종결로 간주될 수 없다(Lefebvre, 2002: 205), 대신 소외/탈소외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변증법적 운동 과정 속에 있는 모멘트로 이해된다. 또한

그에 의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오래된 형태의 소외들(경제적 소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소외 등)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가진 많은 소외들이 유발되고 있다. 즉 현대 사회에는 과거 마르크스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소외들(기술적 소외, 일상생활의 총체적 소외 등)이 형성·심화되고 있다(최병두, 2016). 그러나 르페브르가 헤겔과 마르크스의 소외이론들을 비판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수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론들이 그의 연구에서 어떤 개념적 모순이나 부조응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적실하게 통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르페브르를 포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소외에 관한 연구가 마르크스의 초기 연구에 한정되며, 그 이후 『자본론』 등에서 역사적 사실로서 (즉, 현실의 물질세계에서 나타나는) 소외는 경제적 영역으로 축소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하비가 밝히고자 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저술에서 소외의 개념이 자본의 순환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사라졌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5. 소외에 대한 재인식과 탈소외된 도시에 대한 권리

### 1) 소외에 대한 재인식

헤겔에서 마르크스로 넘어오면서 소외의 개념은 사변적 사고(정신세계의 발전 과정으로서 소외)에서 유물론적 사고(역사적 사실로서의 소외)로 전환하게 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르페브르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소외론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자 했다. 특히 현실 세계에서의 소외와 관련하여, 르페브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가 목격했던 생산영역에서의 노동자의 소외와 같이 오래된 형태의 소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일상 생활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소외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가 소외에 관한 마르크스의 경제적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중적 소외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현실 세계의 소외에 관한 르페브르의 연구는 특히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중적 소외들, 특히 소비 및 여가부문에서 소외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와 여가 활동은 생산활동(즉, 노동)으로부터 분리되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영역(또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영역)이 되었지만, 결국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전략 대상이 되면서 자본 축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광고 등으로 유도된 소외된 소비(주의)와 여가 활동은 유효수요를 자극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에 의해 추동된 것이라고 하겠다. 노동에서 소외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비에서 이를 보상 받기를 원하지만,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소비에서도 필수적으로 소외된다. 둘째, 오늘날 이러한 다중적 소외들은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르페브르는 “도시적 소외는 다른 모든 형태들의 소외를 담고 있으며, 이들을 지속시킨다”고 주장한다(Lefebvre, 2003b: 92). 그의 도시적 소외론은 『일상생활 비판』에서 제시된 소외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 『공간의 생산』에서 제시된 ‘추상공간’에 의한 소외와 그 대안으로 ‘차이공간’을 위한 탈소외의 정치에 관한 논의로 나아간다(최병두, 2018).

소외에 관한 르페브르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특성들은 하비의 연구로 이어진다. 하비는 자본의 총체적 모순들을 연구하면서 이들 가운데 하나로 ‘보편적 소외’를 강조하였으며, 최근 소외의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우선 현대 도시생활에서 소외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소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비(2014a)에 의하면 오늘날 도시 생활에서 상품의 사

용가치는 상실되고 자연과의 감성적 관계는 교환가치에 의해 지배되며, 소원한 상품화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는 르페브르와 유사하게 “소외된 소비는 도시를 점유하고, 우리들을 보상적 재화의 풍요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한다. 이러한 재화의 소유는 시장에서 인간 욕구에 따른 선택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소외된 보상적 소비의 증대는 그 자체의 내적 파괴적 역동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소외에 관한 하비의 관심은 소외의 다중적 양상들과 근원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품화, 화폐체계, 부의 불평등, 노동분업, 소비주의, 기술과 기계의 발달, 젠트리피케이션, 직장에 대한 만족도나 법적 불평등 등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소외뿐만 아니라 주관적 소외, 그리고 소외에 대한 저항과 탈소외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나열식으로 혼란스럽게 서술된다.

그러나 하비는 그의 최근 논문(Harvey, 2018)에서 소외에 관하여 정교하고 이론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그는 도시에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소외들, 특히 소외된 소비와 부채 구조를 사례로 들면서, 그 근원을 밝히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부채 구조 전체는 사회적 통제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기본적 자유를 축소시키고 이들의 소외감을 확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오늘날 신용체계의 발달은 생산에서 창출된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사람들을 금융 및 주택 시장체계에 종속시키고, 이들의 노동을 금융자본에 포획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비는 이러한 소외의 근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맑스가 그의 초기 저술들과는 달리 『요강』에서 새롭게 제시한 소외의 개념을 찾아낸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초기 저서에서 ‘논리적’ 성찰에 따라 논의되었던 소외의 인간주의적 개념화는 『요강』에서 현실세계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개념의 ‘과학적’ 표현으로 재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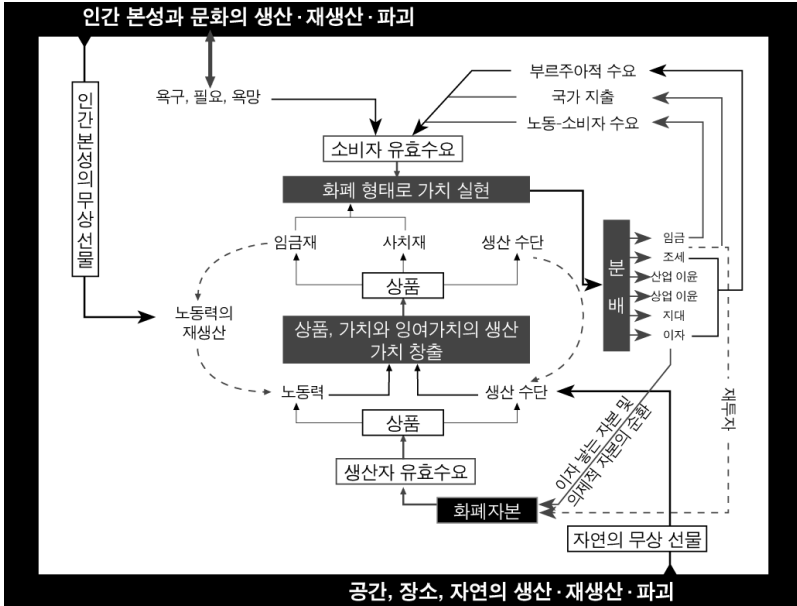
소외 개념의 과학적 표현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소외는 생산의 모멘트에 한정되지 않으며 교환(또는 유통)의 모멘트, 즉 가치 실현의 모

멘트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이윤은 노동을 소외시키고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자본가는 교환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화폐화하여 이를 실현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 점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소외 시점의 이윤(profit upon alienation)’<sup>5)</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모순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하비는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총체성으로서 자본의 순환 과정은 생산, 유통, 분배라는 세 가지 주요 모멘트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새로운 도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형태의 소외들(그리고 이에 따른 투쟁들)은 가치 생산의 모멘트보다는 가치 실현의 모멘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부채 구조로 인한 소외를 서술한다.

소외의 새로운 이론화를 위한 이러한 하비의 연구, 특히 『요강』에서 마르크스가 새로운 ‘과학적 표현’으로 제시한 소외 개념을 발굴하고, 이를 전체 자본순환 과정을 구성하는 모멘트들과 관련시키고자 했다는 점은 앞으로 소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처럼 보인다. 사실 그 동안 소외에 관한 마르크스의 연구는 그의 초기 저서들에서 인간주의적(해결적) 관점에서 제시되었지만 역사적 사실로서 자본주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점차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하비에 의하면 소외는 단순히 논리적(사변적) 양식이 아니라 과학적 표현 양식으

5) 『자본론』에서 교환(또는 상업활동)에서 소외는 상품의 물신성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가 『요강』에서 교환 영역에서 직접 소외의 개념을 논의했다는 점은 특이하다. 마르크스는 『요강』에서 유통 또는 교환의 영역에서 이러한 소외가 나타난다는 점을 여러 대목에서 논의하지만, ‘profit upon alienation’이라는 용어는 단지 한번 스투어트(Steuart)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사실 영어 단어 alienation는 소외(또는 소원함, 낯섬 등)의 의미뿐만 아니라 양도(처분)의 의미도 가진다. 특히 교환이나 유통의 영역에서 이 단어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소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소외 시점의 이윤’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이 용어에서 upon은 on의 시간적 의미로 ‘~할(일) 때’로 번역될 수 있으며, 모멘트의 개념을 함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8〉 총체성으로서 자본의 순환에 관한 하비의 도식



자료: Harvey(2018: 434).

로도 이론화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소외는 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잉여)가치의 창출을 위한 생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환(유통)의 영역에서도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점은 그의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과도 조응한다고 하겠다(Fuchs, 2018).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에 함의된 것처럼, 이러한 설명은 현대 도시들에서의 소외에 관한 연구에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또한 자극한다.

그러나 소외에 관한 하비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통찰력 또는 유의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모호한 점을 남겨두고 있다. 우선, 하비에 의하면, 소외의 과학적 개념화는 인간주의적 개념화와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하비는 “자본은 객관적 및 주관적 외형들(garbs) 모두에서 소외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상이한

개념화를 소외에 관한 통합된 이론으로 결합시키고자 하지는 않았다. 둘째, 유사한 맥락에서 하비는 자본의 전체 순환 과정에서 가치의 실현 시점에서의 소외는 생산 시점에서의 소외와는 상이한 구조와 논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즉, 하비는 총체성으로서 자본의 순환을 세 가지 모멘트로 구분하고 각 모멘트에서 상이한 소외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간을 서로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예로 그가 제시한 현실 사례로 부채 구조는 단순히 기본적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한다. 이러한 점은 분명 미래 노동의 소외를 의미하지만, 하비는 이것이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셋째, 하비는 도시적 배경에서 소외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고, 도시는 탈소외를 위한 운동의 장소라고 강조한다. 즉 자본주의 도시는 “대중 소외의 우선적 장소이며, 따라서 혁명적 분노가 발발하는 발화점”이라고 주장된다 (Harvey, 2018). 그러나 르페브르와는 달리 (탈)소외를 공간적 또는 도시적 배경에서 새롭게 이론화하지는 않았다.

## 2) 탈소외된 도시에 대한 권리

하비에 의해 새롭게 인식된 소외의 개념이 도시적 또는 공간적 배경에서 어떤 특정한 근원을 가지며, 또한 이러한 근원을 해소하고 어떻게 탈소외된 도시를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물론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 개념에 기반을 두고, 공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절대공간, 역사공간, 추상공간, 모순공간 그리고 대안적 공간으로서 차이공간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적·관료기술적 사회에서 추상공간의 만연으로 인해 소외가 유발되어 극에 달하며, 따라서 이러한 추상공간에 내재된 모순의 극복을 통해 탈자본주의적이고 탈생산주의적인, 즉 탈소외된(자율관리) 차이공간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르페브르(Lefebvre,

1991: 67)는 “공간의 생산과 그 생산 과정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제안한 세 가지 모멘트로써 공간의 생산과 더불어 추상공간에서 차이공간으로의 공간적 특성 전환에 관한 이러한 주장도 사실 공간의 개념적 변화에 관한 성찰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공간의 물질적 전환을 이론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외의 도시(공간)적 근원과 탈소외된 도시의 물질적 및 개념적 특성에 관한 근본적 연구는 일단 체쳐놓고, 공간적 정의와 관련하여 탈소외의 개념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를 반영한 ‘탈소외된’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정의에 관하여 직접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의란 탈소외된 상황, 즉 사회적 의사결정과 생산 과정에 평등한 집합적 통제력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결사한 생산자들의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탈소외된 사회의 개념은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유발되는 소외와 관련된다. 즉,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력과 더불어 그들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하게 된다. 자신의 노동력과 더불어 창조적 능력에 대한 통제권의 박탈은 소외(즉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소외뿐 아니라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인간 종으로부터의 소외 등)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는 자본과 노동 간 계급관계의 철폐와 더불어 사적소유제 및 노동분업의 폐지 등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탈)소외를 위한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한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다. 르페브르가 주장하는 것처럼,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는 총체적이고 어디에나 편재되어 나타난다. 즉 소외는 단지 생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소비와 여가를 포함하여 일상생활 전반에서도 나타난다. 하비는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소외의 근원을 보다 과학적인 표현으로 자본 축적 과정에 필요한 잉여가치 실현의 모멘트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고 나아가 탈소외된 도시의 구축(즉 공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에 공통적인 관



심을 가진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실천적 개념이지만, 또한 (탈)소외와 관련된 이론적 개념이기도 하다. 이론적 관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탈소외를 위한 주장 및 실천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탈소외를 위한 도시사회운동의 출발점으로 ‘소외의식(즉, 소외에 관한 자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대사회 특히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외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도시인들은 소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르페브르가 “소외 의식은 우리를 소외로부터 해방시키거나 또는 해방시키기 시작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소외의 의식은 탈소외의 정치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외의 자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겠다. 사실 헤겔과 맑스 이후 소외에 관한 오랜 철학적 전통과 많은 (자각적, 성찰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소외는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다양화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를 의식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반응은 전형적으로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다. 또한 서구 복지국가들은 정책적으로 이러한 소외감을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탈산업사회로의 전환 이후 소외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대안이 없다’는 명분으로 소외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람들은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퇴락한 조건들로 인한 억압과 고통(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열악한 주거 또는 소비조건들뿐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부채로 인한 미래 소득의 차압 등)으로 부정의(불평등, 차별화 등)와 소외를 자각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분출하면서, 이를 유발하는 생산과 생활의 조건들을 바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도시생활에 만연한 부정의와 소외에 대한 이러한 저항을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개념이 바로 ‘도시에 대한 권리’이다. 이 개념은 그 자체로 탈소외에 대한 포괄적 관심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탈소외된’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 용어는 르페브르가 큰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 68운동을 선도하는 구호가 되었으며,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하비에 의해 새롭게 주창되면서 미국 월스트리트점거운동에서 나아가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금융자본에 반대하는 도시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와 같이 도시운동에서 저항과 요구를 담아내는 용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리학 및 관련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끄는 용어가 되고 있다. 예로, 미첼(Mitchell)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공적 공간을 위한 사회적 정의와 관련시켜 고찰하면서, “누가 도시 및 이의 공적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가, 이 권리는 법과 거리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권리는 어떻게 정치화되고, 정당화되고, 손상되는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현실세계에서] 제한된 권리는 도시에서 사회적 정의(또는 이의부재)에 함의된 형태의 권리와 어떻게 경쟁하는가”를 밝히고자 했다(Mitchell, 2003: 4). 이러한 점은 앞서 인용한 소자(Soja, 2010: 95)의 주장, 즉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간적 정의와 개념적으로 뒤얽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메리필드(Merrifield, 2013)는 이 개념에 근거를 두고 행성적 도시화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도시 공간의 근본적 성격을 중심성, 모임, 만남 등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이 단순히 도시공간에서 전개되는 어떤 실천적 함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개념이나 나아가 생애사적 연구주제였던 소외의 개념과 관련시켜 설명하지는 않았다. 사실 르페브르는 이 용어를 프랑스 68혁명을 촉진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제안하기도 했지만, 또한 1960년대 후반 도시화의 실증주의적 및 기술관료적 형태에 대한 비판과 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 용어를 상품화된 소비와 레저를 위한 일상생활 공간을 향유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전환된 도시생활에 대한 권리로 묘사했다(Lefebvre, 1996: 158). 이러한 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

한 르페브르의 정형화는 “도시 공간의 자율관리 전환을 위한 요구와 더불어 추상공간의 파괴적 폭력[그리고 소외]에 대한 근본적 반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된다(Butler, 2017). 버틀러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간적 정의를 ‘도시에 대한 권리’(특히 느슨하게 정의된 개혁주의적 개념)와 등치시키기보다는 르페브르가 제시했던 모멘트 이론을 도입하여 공간적 정의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버틀러는 이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현대 도시공간에서 일상화된 소외와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하비 역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강조하지만, 도시적 소외와 직접 관련시켜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재구성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는 도시적 소외와 탈소외를 함의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다. 예로 하비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를 “도시 일상생활이 쇠퇴하는 위기에서 비롯하는 실존적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한다(하비, 2014b: 9). 여기서 ‘실존적 고통’이란 바로 소외를 의미한다. 또한 하비는 “도시생활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깨달을 때, ... 의미 있는 도시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비, 2014b: 19). 이러한 주장은 르페브르가 소외 의식이 탈소외 정치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점과 더불어 도시의 자율관리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관리의 개념은 하비가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제시한 주장, 즉 “도시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노동에 종사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산한 것에 대한 집단적 권리는 물론 어떤 유형의 도시 공간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집단적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에도 반영된다(하비, 2014b: 233~234).

요컨대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이 단지 현장의 요구라는 실천적 의미뿐 아니라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소외 의식에서 나아가 도시의 자율관리를 함의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심원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점에서 하비(2014b: 2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

시에 관한 권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기보다 탈소외와 자율관리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역과 같다고 하겠다. 또한 이 개념은 아직 보다 적실한 이론적 의미들로 더 많이 채워져야 할 ‘기표’이며, 동시에 (공간적) 정의의 정치를 도시권의 사고와 연계시킬 때 느슨한 개혁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실천적 개념이다. 즉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은 도시가 물신화된 자본이나 권력에 의해 전유되고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생산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 열망에 따라 도시를 새롭게 건설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도시생활이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음을 깨닫고, 보다 의미 있고 덜 소외된 대안적 도시생활을 영위하며, 궁극적으로 탈소외와 자율관리(현실 세계에서 자율관리뿐 아니라 정신세계에서 자아의식의 실현)의 공동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적 규모로 전개되었던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유발·심화되어 온 사회공간적 불평등과 부정의 문제들은 정의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공간적 (부)정의를 새롭게 개념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공간적 정의의 재구성을 위하여, 우선 공간은 하나의 사물이나 실체가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성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적 배경에서 발발하는 정의의 정치를 위하여 영역성을 가지는 것을 개념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의의 개념은 어떤 주어진 실체 또는 단순히 생산되고 배분되는 생산물로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공간, 즉 ‘공간의 생산’이 어떻게 정의로운 생산관계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공간적 정의는 세 가지 범주들, 즉 분배적 정의, 생

산적 정의 그리고 인정의 정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면서 또한 통합된 사회공간적 정의는 단순히 어떤 외형적 사회관계나 공간편성을 정의의 지표들로 측정하거나 또는 기존의 사회정의이론을 공간적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설정되기보다는 그 자체로 공간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르페브르의 모멘트 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정의를 새롭게 재구성하도록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공간적) 정의는 ‘불가능한 가능성’, 즉 진부한 일상성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면서 이에 함의된 가능성을 추구하는 내재적 능력의 모멘트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의가 절대적인 것 또는 유평피아적 총체성으로 인식되는 순간, 그 자체 부정성의 작동으로 불가능한 것, 운명적인 실패 또는 비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모멘트로서 정의는 가능성과 불가능성, 유평피아와 비극적 실패의 변증법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일상생활에서 정의의 모멘트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려는 희망을 담고 있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정의 개념은 그의 생애사적 연구주제인 탈소외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서로 등치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즉, 정의란 일상생활의 진부함으로부터 탈소외되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탈소외는 어떤 절대적 상황 또는 소외 일반의 종결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소외/탈소외의 변증법적 과정 속에 있는 모멘트로 이해된다. 소외에 관한 르페브르의 연구는 단순히 개념적(또는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일상생활(예로 소비와 여가활동)에서 유발되는 ‘도시적 소외’의 문제에 준거하지만, 자본주의의 축적 메커니즘과 직접 관련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는 최근 연구에서 오늘날 도시생활에서 소외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편적 소외’ 개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가 『요강』에서 논의한 ‘과학적 표현’으로서 소외의 개념을 찾아내어 소외의 새로운 이론적 근원을 밝히고자 한다. 즉, 오늘날 심화된 소외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잉여가치(이윤)의 창출을 위해 ‘가치 생

산'의 모멘트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가치 실현'의 모멘트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비의 연구에서 밝혀진 '가치 실현' 영역에서의 소외 개념은 몇 가지 모호한 점들을 남겨두고 있지만, 앞으로 소외에 관한 연구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러한 소외의 개념은 탈소외 또는 공간적 정의를 위한 도시정치를 위해 르페브르와 하비가 부각시킨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에도 이미 함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배경으로 특히 공간적 정의 또는 탈소외의 관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도시에 대한 권리는 소외/탈소외 모멘트의 변증법적 운동에서 공간적 정의에 대한 권리, 즉 탈소외의 '불가능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도시에 대한 권리는 특정한 사물이나 한정된 대상으로서 (도시)공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 의미에서 '공간의 생산'에서의 정의로운 관계와 관련된 권리이다. 셋째,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거치는 가치 생산의 모멘트에서 유발되는 노동의 소외와 더불어 가치 실현의 모멘트(즉 교환과 소비)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소외에 대해 저항하면서 이의 극복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넷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한 정치는 유토피아적 공간 정의의 총체적 달성보다는 일상생활의 소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도시생활의 자율관리를 추구하는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원고접수일: 2019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19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25일

최종원고접수일: 2019년 3월 25일

❖ Abstract

Spatial justice and the de-alienated city

Choi, Byung-Doo

This paper is to reconceptualize spatial justice and the alienated city in order to deal with problems of socio-spatial injustice which have got worse increasingly in the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It first looks into empirical cases on social and spatial injustice in Korea on the one hand, and conceptual clues to see injustice problems inherent in neoliberal capitalism on the other, and then discusses recent studies on spatial justice,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space and that of justice, and pointing out some of their limitations. The second half of the paper tries to reconceptualize spatial justice on the basis of Lefebvre's theory of moment and alienation/dealienation dialectics. And finally it introduces a new theoretical clue on alienation which has been suggested by Harvey in his concept of 'universal alienation' and in his re-interpretation of Marx's *Grundrisse*; that is, alienation at the moment of realization of value in capital circulation, and emphasizes the right to the dealienated city for politics of spatial justice in contemporary cities.

Keywords: Spatial justice, Lefebvre, moment, alienation, the de-alienated city, right to the city

## 참고문헌

- 박노완. 2013. 『도시 및 공간 정의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철학사상》, 49, 289~310쪽.
- 김경근·이현우. 2017.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마강래. 2018.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개마고원.
- 스미스, 닐. 2018. 『불균등발전』. 최병두 외 옮김. 한울(Smith, N. 2008. *Uneven Development* (3rd edn). Univ. of Georgia Press).
- 신승원. 2014.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공간이론과 공간정치-『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도시인문학연구》, 6(1), 63~98쪽.
- 임보영·이경수·마강래. 2018. 『지방소멸과 저성장 시대의 국토공간전략: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8(2), 45~70쪽.
- 장세룡. 2006.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와 경계》, 58, 293~325쪽.
- 정준호. 2018. 『지역 간 소득격차와 위험공유』. 《공간과 사회》, 64, 12~44쪽.
- 조성민. 2018.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산업경제(KIET)(2018.10).
-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한울.
- \_\_\_\_\_. 2016. 『도시적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576~598쪽.
- \_\_\_\_\_. 2018.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53(2), 149~172쪽.
- 통계청. 2018.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도자료, 2018.12.20).
- 하비, 데이비드. 2014a. 『자본의 17가지 모순』. 황성원 옮김. 동녘(Harvey, D. 2014. *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 Profile Books).
- \_\_\_\_\_. 2014b. 『반란의 도시』.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 Brenner, N. 2009. "Open questions on state rescaling."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2, pp.123~139.
- Brenner, N. and N. Theodore. 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in N. Brenner and N. Theodore(eds). *Spaces of Neoliberalism: Urban Restructuring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Oxford: Blackwell, pp.2~32.
- Brenner, N. and S. Elden. 2009. "Introduction." in Lefebvre, H. *State, Space World: Selected Essays*. in N. Brenner and S. Elden(eds), Minneapolis and London: Univ. of Minnesota Press, pp.1~48.



- Butler, C. and E. Mussawir(eds). 2017. *Space of Justice: Peripheries, Passages, Appropriations*. New York: Routledge.
- Butler, C. 2017. "Space, politics, justice." in Butler, C. and Mussawir, E.(eds). *Space of Justice: Peripheries, Passages, Appropriations*. New York: Routledge, pp.113~131.
- Fainstein, S. 2010. *The Just Cit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 Fuchs, C. 2018. "Universal alienation, formal and real subsumption of society under capital, ongoing primitiv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TripleC*, 16(2), pp.454~467.
- Gardiner, M. "Everyday utopianism: Lefebvre and his critics." *Cultural Studies*, 2/3, pp.226~254.
- Harvey, D. 1991. "Afterword to Lefebvre, H." *The Production of Space*. Malden MA.: Blackwell, pp.425~432.
- \_\_\_\_\_. 2009. *Cosmopolitanism and the Geographies of Freedom*. Columbia Univ. Press.
- \_\_\_\_\_. 2014. "Alienation and urban life." in J. Brekke et al(eds). *Crisis-Scapes: Athens and Beyond*. Crisis-Scape.net.
- \_\_\_\_\_. 2018. "Universal alienation." *TripleC*, 16(2), pp.424~439.
- Jessop, B. 1998. "The narrative of enterprise and the enterprise of narrative: place marketing and the entrepreneurial city." in T. Hall and P. Hubbard(eds). 1998. *The Entrepreneurial City*. Chichester: Wiley, pp.77~99.
- Jonas, A. E. G. 2012. "Region and place: regionalism in ques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2), pp.263~272.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Malden MA.: Blackwell.
- \_\_\_\_\_. 2002.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2. London and New York: Verso.
- \_\_\_\_\_. 2003a. "The inventory." in S. Elden and E. Lebas(eds.). *Henri Lefebvre: Key writings*, London, pp.166~176.
- \_\_\_\_\_. 2003b. *The Urban Revolution*. Univ. of Minnesota Press.
- \_\_\_\_\_. 2009. *State, Space World: Selected Essays*. in N. Brenner and S. Elden(eds). Minneapolis and London: Univ. of Minnesota Press.
- MacLeod G. and M. Jones. 2007. "Territorial, scalar, networked, connected: In what sense a 'regional world'?" *Regional Studies*, 41(9), pp.1177~1192.
- Marcuse, P., J. Connolly, J. Novy, I. Ouvo, C. Potter and J. Steil(eds). 2009. *Searching For the Just City: Debates in Urban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itchell,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Guilford Press.
- Merrifield. 2013. *The Politics of the Encounter: Urban Theory and Protest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Athens, GA: Univ. of Georgia Press.

- Marx, K. 1973. *Grundrisse*. London: Penguin.
- Peck, J., N. Theodore and N. Brenner. 2009. "Neoliberal urbanism: models, moments, mutations." *SAIS Review*, 29(1), pp.49~66.
- Soja, E.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 Williams, J. 2013. "Towards a theory of spatial justice"(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Los Angeles).